

‘노무현 부메랑’ 고민되는 민주

조문정국 후 급등했던 지지율 하락세 뚜렷

‘민주 대통합’ 외침 불구 자체동력 부족 고심

민주당이 ‘노무현 부메랑’ 현상에 직면하면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후폭풍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등 주가가 올랐던 민주당이 조문 정국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지율이 급락하고 정치적 입지가 점차 축소되는 등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20%를 넘어 서며 한나라당을 추월했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조문정국이 마무리되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였던 지난달 초반 20% 후반을 기록하며 한나라당을 추월했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달 중순 20% 중반으로 하락하며 한나라당에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달 후반에는 20%선이 무너지며 다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전으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주당 지지율 상승이 자체 동력이 아닌 노

전 대통령의 서거 효과에 의해 형성된 거품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 압박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으로 꼽히면서 민심의 반발이 ‘상주’(喪主)를 자처한 민주당에 몰렸지만 조문정국이 마무리되면서 민심이 다시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모아진 민심을 제대로 응집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권과 타협과 협상을 병행하며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강경 일변도로 나서면서 스스로 입지를 좁혔다는 것이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당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개원 및 비정규직 법안 개정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초강경 자세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당 내에서

는 정치적 입지를 좁히는 행위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의 노선이 중도에서 진보 쪽으로 방점이 찍히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민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 환원에 나서고 한나라당도 각종 민생정책을 제시함에 따라 민주당 색채가 강했던 중도 진영까지 여권에 점령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하반기 정국은 여권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인적쇄신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정쇄신책이 제시될 경우, 비정규직 개정 및 미디어법 처리 불가를 고집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정외의 발목만 잡는 이미지가 굳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에 요구되는 것은 대통합을 통한 전열정비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정동영 의원 복당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주가가 급상승했던 민주당이 조문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역효과에 직면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강경 모드로 일관하기 보다는 통 큰 대통합과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등 돌리는 여야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나경원(오른쪽) 간사와 민주당 전병헌 간사가 7일 오전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간사회의 브리핑을 가진 뒤 헤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미디어법 13일 처리 최후통첩… 민주 강력 반발

꼬이는 여야… 3차 입법대치 우려

여야가 최대 쟁점법안인 비정규직 법과 미디어법 처리 문제를 놓고 좀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극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지난달 26일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는 7일까지 12일째 표류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최후 수단인 국회 의장 직권상정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면서 또다시 국회 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져 3차 입법대치가 우려되고 있다.

여야는 7일에도 서로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은 채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협상이 전진되지 않을 경우 이들 법안의 직권상정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민주당은 실력 저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비정규직법 유예안 처리와 관련, “2~3일 냉각기를 두고 간사들이 물밑에서 협의 중”이라며 “협상노력을 계속하다가 안 되면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해고 대란은 어디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협상실패시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날 여야 문방위 간사회의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오는 13일 방송법 등 미디어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처리하겠다고 전격 통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3일까지 여야 논의를

거쳐 이후 상임위 등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13일까지 상임위를 마친다면 그날은 한나라당에 ‘제왕의 날’이 될 것”이라며 “끝까지 대화로 풀자는데 의식이 많다고 해서 짓밟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간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직권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김형오 의장이 대타협을 종용하며 막후 중재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 파국시 여야 모두 떠안게 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안으로 합의처리하고 미디어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전격 등원론’ 대두

“국회에서 직권상정 막아야”

지도부 당내 의견수렴 착수

여야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전격 등원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7일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정규직 법안과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의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에 전격 등원, 현장에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 장기간 국회를 방치하고 있다는 여론의 부담도 있는데다 이미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고 있고 비정규직법 논의를 내세워 전날부터 환노위를 개최하는 등 부분적으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는 점도 ‘등원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등원한다면, 상임위에서의 법안 심의를 통해 시간을 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여야 협상을 촉구한다면 김형오 국회의장

의 직권 상정을 일정기간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병헌 간사도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한다면 선언한 한다면 미디어법 문제를 상임위든 어디든 논의할 수 있다”며 조건부 상임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또, 5선 중진인 박상천 의원도 이날 원내대표단-중진 연석회의에서 “시간은 우리를 안 기다리는 만큼 상임위 참여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앞서 전날 의총에서도 박지원, 김성곤, 서종표 등 일부 의원들이 등원론을 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원내 지도부는 전날부터 몇 개 상임위별로 돌아가며 미디어법과 비정규직 처리 방안과 등원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모 의원은 “차라리 전격적으로 등원, 상임위를 통해 MB 악법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설명하고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때 실력 저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盧 전 대통령 묘역 ‘八道 석재’로 조성

석함에 ‘참여정부 기록’ 다큐 DVD 담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은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석재들로 조성된다.

‘고 노 전 대통령 아주 작은 비석 건립위원회’는 7일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마을회관에서 노 전 대통령 안장계획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건립위원회 유홍준 위원장(전 문화재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철학에 맞춰 묘역 조성과 안장 시설에 전국 물산이 고루 사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안장시설 중 유골을 모시는 백자가마는 경기도 성남에서 기증받았고 백자가마를 담는 연꽃 모양의 석함은 전북 익산의 황등석을, 석함을 불안하는 석함은 대리석 중 최고 품질로 알려진 충북 보령의 남포오석을 각각 기증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묘역 주변에 설치되는 두께 12cm 정도의 납작한 돌인 박석도 제주 현무암과 강화도 박석, 남해 청석, 북한 황해도 해주 석돌 등이 골고루 사용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유골을 모신 백자가마(직경 30cm 높이 25cm)를 연꽃 모양의 석함(직경 50cm 높이 50cm)에 담아 그 석함을 대리석 석함(가로 124cm 세로 68cm 높이 79cm)에 봉안한 뒤 지하에 매장하는 방식으로 안장한다고 밝혔다.

이 석함에는 부장물로 국정홍보처가 제작한 ‘참여정부 5년의 기록’이라는 5부작 다큐멘터리 DVD와 노 전 대통령의 일대기 및 서거 이후 시민들의 추모 모습을 담은 10분 안팎의 추모 영상을 담은 DVD가 담겨진다. 비석에는 ‘대통령 노무현’ 6글자만 새겨졌다.

/연합뉴스

오늘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는 8일 백용호(사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백 후보자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세무 행정 경험이 없는데다 최근 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함에 따라 전문성과 도덕성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쟁점 사항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백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장개발연구위원장을 지냈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등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코드 인사 논란 및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가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백 후보자가 큰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 아래 세무행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춰 백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문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방안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무등빌딩임대

- 특상위 업무서버
- 강동지역, 남동지역
- 저세월임대조건
- 전세 주세비율 인하
- 출입금임대 내·남세
- 확실한 무등산 도모

임대문의 062)222-0527

뜨거워지는夫婦(센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잃고 싶은...
모든 것을 잃고 싶은...
모든 것을 잃고 싶은...
모든 것을 잃고 싶은...

상남 070-7786-8710, 070-7786-8710
전화 010-5296-4114

비데

부엌의 신물과 함께하기 최고다!
단, 노비타 비데를 만나기 전까지는...
생각과 다른 최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일품 있는 최고 선물,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D-KA150
278,000원
195,000원

노비타비데호남출판 비데프라자 | 062)515-1144